

# KNSI REPORT

특별기고 제15호

## 제1차 '이미티지보고서'(2000)와 제2차 '이미티지보고서'(2007) :비교분석과 한국에 주는 정책적 함의

박건영  
(가톨릭대학교 국제학부 교수)

### 소개

1,2차 '이미티지보고서'를 비교분석하고, 그 정책적 함의에 대해 살펴보았으며, 노무현정부가 제시했던 이른바 '동북아균형자론'에 대해 대안을 제시하면서, 한국은 전통적 의미에서의 균형자라기보다는 동북아의 평화, 정의, 친선을 목표로 새로운 지식과 비전을 창출하고 주도하는 중용국가(中庸國家) 또는 지적국가(知的國家)로 자리매김할 가능성에 대해 논했다. 나아가 초당적 한국판 '이미티지보고서'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 I.

2007년 2월 리처드 아미티지 전 국무부 부장관과 조셉 나이 Jr. 전 국방부 국제안보담당 차관보를 비롯한 미국 내 동아시아 및 일본 전문가들은 2020년을 대상 연도로 미국의 대 아시아 중장기 전략과 관련한 정책대안을 발표하였다. ‘미일동맹: 2020년까지의 대 아시아전략 *U.S.-Japan Alliance: Getting Asia Right Through 2020*’ 이라 명명된 이 보고서는 2000년에 발표된 이른바 ‘제 1차 ‘아미티지보고서’ *The United States and Japan: Advancing Toward a Mature Partnership*’의 개정판인 셈이다. 민주 공화 양당의 온건파와 외교안보 브레인들이 참가해서 작성한 이 보고서는 그 초당적 현실주의적 성격으로 인해 부시 정부의 신보수주의 외교안보정책의 문제를 교정할 필요성을 느끼게 될 미국 신 행정부에 정책지침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사실, 2000년 ‘아미티지보고서’와 2007년 ‘아미티지보고서’는 2000년 ‘나이보고서’, 2007년 ‘나이보고서’라 할 수도 있다. 양 인물이 보고서 작성을 위한 공동위원장을 맡았기 때문이고, 또 “미국의 이익은 아시아에 크게 달려있고, 아시아는 일본을 중심으로 관리되어야 한다”는 이들의 대 아시아관이 나 외교안보철학에 공통점이 많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다. ‘아미티지보고서’가 ‘나이보고서’인 더 중요한 이유는 전자가 클린턴 정부 당시 국방 차관보의 위치에서 조셉 나이 Jr.가 주도하여 1995년 발표한 ‘*United States Security Strategy for the East Asia-Pacific Region*’의 연장선상에 있기 때문이다.

## II.

‘나이보고서’의 배경을 살펴보는 것은 제 1차 ‘아미티지보고서’가 담고 있는 시대적 상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냉전 직후 미국과 일본은 소련역지라는 동맹의 존재이유를 상실하여 양국 관계의 재설정을 필요로 하고 있었다. 특히 “문제는 경제야, 바보야 (It’s the economy, stupid)”라는 정치슬로건으로 현직 부시 대통령에게 승리한 클린턴 신임 대통령은 냉전기간 동안 마모된 미국의 경제력을 역동적으로 성장하던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만회한다는 전략을 세웠고 (예를 들어, ‘아시아태평양 커뮤니티’) 특히 일본의 무역 및 투자 장벽을 낮추는 데 역량을 집중하였다. 아울러, 공화당 정부에 비해 이념적으로 유연했던 클린턴의 민주당 정부는 탈냉전을 이용해 중국을 순치하고 광대한 시장에 적극적으로 진출하려 했기 때문에 대일본 관계에서 우위를 점하고 상대적으로 자유로울 수가 있었다. 일본 아사히신문의 후나바시가 제시하듯, 1990년대 초중반 자동차 부품 수출과 관련한 미·일간 무역갈등은 이러한 “미일동맹의 표류”를 상징적으로 보여주었다.

탈냉전적 경제 무역 논리에 우선권을 부여한 클린턴 정부의 대 아시아 외교안보전략에 제동을 건 것은 조셉 나이 Jr.였고, 그가 주도한 ‘나이보고서 *U.S. Security Strategy for the East Asia-Pacific Region*’였다. 당시 클린턴 정부 내외의 “무역 이익집단들 (the trade guys)”의 영향력이 막강하여 ‘나이보고서’가 채택되고 전세계적으로 부각된 것은 기적에 가깝다고 말하는

연구자도 있다. 물론, 일단의 전문가들이 제시하듯, 일개 ‘차관보’의 구상에 지나지 않았던 ‘나이보고서’는 “무역 이익집단들”의 주목도 견제도 크게 받지 않았다. 그러나 보다 중요하게는 ‘나이보고서’가 담고 있었던 ‘경제-안보 병행 전략’과 중장기적 관점의 필요성, 그리고 미국적 가치 실현을 위한 시장민주주의적 동맹의 중요성 등이 정부 내외에서 공감대를 형성한 측면이 간과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1995년 발표된 ‘나이보고서’는 “아시아에서의 미국의 이해는 지난 2세기 동안 변함없이 계속 존재해왔다”면서 이를 위해 “평화와 안보, 이 지역에 대한 상업적 접근, 항해의 자유, 새로운 주도적 세력 등장의 방지”를 강조했다. 이러한 인식의 틀 하에서 미국은 새로운 시대의 상황에서 우방국들과의 양자간 군사협력관계를 강조하고, 특히 일본과의 군사적 동반자 관계를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제시했다. 통상문제로 인한 지금까지의 껄끄러운 관계를 이제는 강화된 군사동맹 관계로 해결해나갈 것을 제의하면서 “그것이 이 지역의 안보와 안정을 위한 기본 메커니즘”이라고 지적한 것이다. 아울러 ‘나이보고서’는 미국이 중국과 관계를 증진시켜 중국이 국제사회에 건설적으로 통합되도록 지원하고, 이러한 바탕에서 중국이 대량과포무기 확산 방지에 협력하고 군사정책의 투명성을 높이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이보고서’는 한반도 문제와 관련 의미심장한 내용도 담고 있었다. 즉 ‘년-워너수정법안’ 및 그에 기초한 동아시아전략구상(EASI)에 따른 주한미군 3단계감축안을 백지화하고 동아시아-태평양 지역에 10만이라는 현 병력 수준을 유보조항없이 유지한다는 것이었다. 나아가 이 보고서에서 미국은 ‘북한의 위협’이 사라진다 해도 강력한 한미동맹은 동북아의 안정을 위해 계속 유지될 것이라고 밝힘으로써, 주한미군의 존재이유와 역할이 북한역지뿐 아니라 동북아 안정을 도모하는 균형자 또는 안정자로 확대될 것임을 시사했다.

‘나이보고서’의 의미는 1996년 3월, 대만의 정치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하려던 중국의 미사일을 동원한 군사훈련과 1996년 8월 북한의 탄도미사일 시험발사 등에 의해 부각되었고, 미국의 동아시아 각국과의 군사동맹의 중요성도 더욱 강조되었다. 1996년 미·일신안보선언은 워싱턴과 동경이 협력하고, 나아가 미일동맹을 재정의 하는데 핵심역할을 하였다. 이에 따라 미일방위협력을 위한 가이드라인이 개정되었고, 오키나와 관련 특위 보고서, 미사일방어체계 공동연구 등이 결정되어 미일동맹의 재정비가 이뤄졌다.

그러나 ‘나이보고서’와 미·일신안보선언을 통해 미일관계가 표류를 면하고 새로운 ‘경제-안보 병행 전략’에 입각한 협력의 방향으로 전환한 것은 사실이지만, 클린턴 정부의 탈냉전적 실용주의와 경제력 회복 우선 정책은 중국과의 관계개선을 적극 추진토록 추동하였고, 그 결과 일본과 미국 내 친일본세력은 소외감과 불안감을 떨치지 못하였다. 2000년 발표된 제 1차 ‘아미티지보고서’의 집필자들은 “일본의 보수적(risk-averse) 정치지도부가 일본의 경제개혁을 중시한 것처럼 일관성을 결여하고 (episodic) 방향성이 불분명한 미국의 행정부는 미국의 대일본관계 개선을 위한 신중하게 고안된 계획을 마련하는 데 실패했고, 미일신안보선언의 상징은 고위정책담당자들로부터 지속적으로 지지를 받지 못해 고독하게 홀로 서있을 뿐”이라고 적고

있다. 특히 클린턴 대통령이 1998년 6월 중국을 방문하면서 일본을 들리지 않았을 때는 많은 일본인들과 친일 미국 인사들은 과거 일본의 대미 수출에 위협을 느낀 미국이 "일본 때리기(Japan bashing)"에 나섰던 것을 떠올리며 이번엔 중국의 시장을 탐내서 동맹국 일본 "물 먹이기(Japan passing)"를 한 것으로 보고 미국에 대해 큰 배신감을 느꼈다.

한반도의 상황도 미일동맹 특히 일본을 불안하게 한 요인이 되었다. 1998년 8월 북한은 일본 상공을 통과하는 장거리 미사일(북한의 입장에서는 인공위성)을 예고 없이 시험 발사하였다. "불량국가" 북한이 핵과 장거리 운반수단을 보유할 수 있다는 가능성은 국제사회의 긴장과 우려를 자아내었다. 특히 미국은 이러한 "미사일 시험발사"가 전진배치된 미군의 안전을 위협하고, NPT MTCR 등 국제안보제도의 효과와 정당성에 심각한 문제를 제기하며, 나아가 동북아시아에서의 군비경쟁을 자극해 미국의 세계안보전략에 지대한 차질을 빚게 할 것으로 판단하였다. 아울러 이러한 "새로운" 위협은 전역 또는 국가 미사일방위체계(TMD, NMD) 구축의 명분을 제공하였고, 나아가 미국으로 하여금 대북정책의 근본적인 재평가 작업에 나서도록 하였다. 특히 주목할 것은, 1998년 7월 15일 발표되어 별로 주목을 받지 못하던 이른바 '럼스펠드 보고서'가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시험발사로 인해 그 정치적 효과가 극대화되었고 미사일방어체계의 필요성이 크게 대두되었다는 사실이다. 이 무렵 제1차 '아미티지보고서'가 태동되었다.

### III.

제1차 '아미티지보고서'의 내용을 언급하기 전에 집필자들의 면면을 살펴보는 것이 유익할 것이다. 먼저, 아미티지는 미국 신보수주의의 경전이라 할 수 있는 이른바 'PNAC (Project for the New American Century) 서신'에 서명한 인물이다. 클린턴 대통령이 수신인으로 되어 있는 이 서신은 대이라크 봉쇄정책의 이완과 이라크의 대량파괴무기 보유 가능성으로 인해 사담 후세인을 권좌에서 제거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그렇게 해야만 이스라엘과 친미적 산유국들을 보호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아미티지는 2000년 대선 캠페인 동안 콘돌리사 라이스가 주도한 부시 후보 외교자문그룹 "발칸들(The Vulcans)"의 일원으로도 활약했다. 5년 넘게 일본 의회에서 보좌관을 역임한 마이클 그린은 클린턴 시대 국방부 자문관 경험이 있는 학자 출신 일본통이다. 제임스 켈리는 레이건 정부 때 국가안보회의 특보, 국방부 동아태담당 부차관보, 그리고 국가안보회의 아시아담당 선임보좌관을 역임했다. 토클 패터슨은 1998년 미국 방산업체인 레이씨언(Raytheon)의 일본 지부장을 하고 있었다. 그 전에는 부시 Sr. 정부의 국가안보회의 아시아담당 보좌관과 국방부 차관보실에서 일본담당관을 지냈다. 그는 걸프전쟁 당시 일본의 기여를 촉진하는 작업을 담당하기도 했는데 특히 FSX 전투기 공동개발 프로그램, 기술환류 프로그램, 그리고 접수국지원 협상에 관여하였다.

제1차 '아미티지보고서' 참여자 중 가장 주목해야 할 인사는 폴 울포위츠이다. 그는 냉전기

반공주의 민주당 상원의원이었고 미국 신보수주의자들에게 큰 영향을 미친 헨리 마틴 “스콧 잭슨의 보좌관 출신이다. 카터 정부에서 국방부 부차관보의 직책을 맡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레이건 정부에서 국무성 정책기획실장이라는 요직을 맡게 되었다. 윌포워츠는 루이스 “스쿠터” 리비(전 부통령 비서실장), 프란시스 후쿠야마(*The End of History*의 저자), 잘마이 칼릴자드(전 주 이라크 대사, 유엔 대사) 등 신보수주의자들을 참모로 두고 미국의 장기 외교과제를 다루게 되었다. 그는 이어 솔츠 국무장관의 요청에 의해 국무성 동아태담당 차관보의 직을 맡게 되는데, 그는 당시 솔츠와 와인버거 국방장관 간의 갈등을 이용하여 “정치적 동맹”인 국방 부차관보 아미티지 및 국가안보회의 보좌관 개스틴 시거와 함께 미국의 대아시아정책을 주도하였다.

윌포워츠의 정치력과 함께 그의 강한 이념성향을 보여주는 전형적인 역사적 사례가 있다. 특히 이 사례는 한반도의 운명을 바꿔놓은 의미심장한 것이기도 하다. 1970년대 말부터 80년대 중반까지 미국의 주중 부공사를 지낸 찰스 프리먼에 따르면, 1980년대 초 등소평은 와인버거 국방장관에게 중국이 주선하고 미국이 참관하는 남북회담을 북경에서 개최할 것을 제안했다. 프리먼 등 북경 주재 미국 대사관 관리들은 그런 내용의 전문을 보내고 난 후에야 윌포워츠 차관보가 등소평과 와인버거 사이에 오고 간 대화내용을 편집 누락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들에 따르면, 윌포워츠는 오히려 그러한 내용을 들은 적이 없다고 우겼다. 게다가 그러한 내용은 언급된 적도 없다며 완강하게 부인하고 마치 등소평이 그런 언급을 한 것 마냥 그들이 꾸며냈다고 비난했다. 당시 워싱턴은 중국이 한반도 문제에서 주도권을 행사하려 한다는 대사관의 보고를 접하고 의아해했다는 것이다. 프리먼에 따르면, 1984년 조지 솔츠 국무장관이 레이건 대통령을 동반해 중국을 방문했을 당시에도 중국은 또다시 남북한 및 미국이 참여하는 회담문제를 꺼냈다. 솔츠 국무장관은 아트 허벨 대사를 통해 이 제안에 동의했다. 그러나 솔츠 국무장관이 북경을 출발해 서울에 도착하는 사이 윌포워츠 차관보는 또다시 이러한 내용을 반복했다. 프리먼은 당시 윌포워츠가 4자회담에 반대한 이유로 두 가지를 들었는데, 하나는 그가 이념적으로 중국의 구상에 대해 의구심을 품고 있었고, 다른 하나는 그가 정치적으로 밀접히 연관되어 있는 공화당의 우파들의 반발을 의식했기 때문이다. 만일 중국이 당시 제안한 4자회담이 성사되어 교차승인이 이루어졌다면 남한과 미국 등이 “북한 문제”로 수십 년 동안 시달리지 않아도 됐을지 모를 일이다. 특히 북한이 요구해온 바가 북핵 폐기와 북미관계정상화의 교환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더욱 그러하다.

보고서 작성자들 중 상대적으로 자유주의적인 인사로는 조셉 나이 Jr., 프랭크 자누지, 그리고 커트 캠블을 들 수 있다. 나이 Jr.는 국제정치학자로서 국가중심주의와 힘의 역학관계를 중시하는 현실주의에 수정을 가하여 초국가주의, 비군사적 능력, 국제제도 등의 역할을 강조하는 “신자유주의”를 제창한 바 있고, *Bound to Lead*라는 저작을 통해 “소프트 파워(soft power)”의 정책적 함의, 최근에는 아미티지 등과 함께 “스마트 파워(smart power)”의 중요성을 부각하는 데 주도적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나이 Jr.는 과거 클린턴 시대 국방 차관보로서 “동아시아 태평양지역에서 미국의 안보전략은 양자간 군사관계가 핵심을 이루고 있으며, 다자간안보체제는 이

핵심요인을 도와주는 보조적 장치" 라고 말한 바 있고, 이른바 "바퀴축-바퀴살(hub-and-spokes)론"을 통해 제국주의적 비스마르크 외교체계와 유사한 미국 중심의 동아시아지역관리체계를 제시하기도 했다. 나이 Jr.는 카터 정부 때 국무차관 보좌관, 그리고 클린턴 정부 때 국방 차관보를 역임했고, 2004년 대선 때는 민주당 케리 후보를 자문했으며, 집권 시 국가안보보좌관을 맡을 것으로 예상되기도 했다. 자누지는 미국 내 주류 인사 중 독보적인 자유주의 정책전문가라 할만하다. 그는 국무부에서 근무한 후 상원의교위원회 민주당 측 선임보좌관으로서 장기간 조셉 바이든 상원위원에게 중국 일본 한국 등 동아시아 관련 정책을 제시하고 자문하였다. 커트 캄블은 해군 장교 출신으로 클린턴 정부 하에서 국방부 아태담당 부차관보와 국가안보회의 국장을 역임했다. 특기할만한 점은 그가 1996년 국방부 부차관보의 실무자임에도 불구하고 앤소니 레이크 국가안보보좌관 등과 함께 역사적인 클린턴-하시모토 정상회담과 미·일신안보선언을 준비하는 고위 태스크팀에 참여하였다는 점이다. 이념적으로 "중도(centrist)" 를 표방하고 있는 그는 올포위츠에 대비되는 영향력 있는 민주당 외교안보전문가로 평가되고 있다.

#### IV.

양 보고서는 공히 일본과 미일동맹의 전 세계적 가치를 강조하면서 말문을 연다는 데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간단히 말해, 미국의 세계전략의 핵심은 아시아이고, 아시아 전략의 핵심은 일본과 미일동맹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미일동맹은 그들의 용어대로 "세계동맹(global alliance)"이다. 그런데, 집필자들에 따르면, 문제는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이렇게 중요한 미일동맹이 효과적으로 관리되고 있지 않다는 데 있다. 1차보고서는 냉전 직후 소련이라는 공동의 위협이 사라진 후 안보보다 경제 문제가 부각되면서 동맹이 표류하였다는 '나이보고서'의 판단의 연장으로서 양국 정부가 1996년 신안보선언을 실행에 옮기는 데 성공하지 못했음을 지적하고 있고(특히 클린턴 정부의 "중국 중심 실용주의" 외교노선의 문제), 2차보고서는 테러와 이슬람 극단주의와의 전쟁에 대한 몰두로 인해 미국이 대열강정책에 소홀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요점은 다시 "미일동맹으로!"인 셈이다.

<표 1>을 참조하며 보다 구체적인 내용을 비교분석해보자. 첫째, 미일동맹의 관리와 비전. 1차보고서는 요컨대 미국의 이익과 세계의 안정을 위해 미일동맹을 미일동맹 수준으로 격상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에 대한 제약이 해소되어야 한다. 특히 일본은 유엔안보리상임이사국으로 진출하기 위해서도 평화과괴에 대한 무력응징의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는 논리다. 일본은 "기부자(donor)"라는 전통적인 역할에서 벗어나, 즉 "비용분담(burden-sharing)"에서 "권력분담(power-sharing)"으로 역내 안보 역할을 증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시작 단계의 일부로서 미일 미사일방어체계 협력 강화와 군사기술협력 장려를 제시하였다. 2차보고서는, 후술하겠지만, 1차보고서의 미일동맹강화론과 유의미한 차이를 보여준다.

그러나 동맹강화라는 큰 맥락에는 유사하다. 2차보고서는 먼저 미국 민주당이나 기업을 중심으로 제시되고 있는 "일본의존불가론"을 비판한다. 즉 미국이 미일동맹에 많이 의존하게 되면 역사문제를 둘러싼 중일 한일간 긴장에서 보듯 미국과 일본이 아시아에서 소외될 것이며, 따라서 미국의 장기 전략은 중국 중심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주장은 미일동맹이라는 미국의 최대 전략자산을 무모하게 약화시킬 것이라는 지적이다. 2차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경 확실히 되는 것은 미국과 일본이 여전히 민주체제와 공유된 가치에 기초한 세계 최대 경제국일 것이라는 사실이며, 이런 연유로 미일동맹은 과거와 마찬가지로 아시아의 미래를 지속적으로 형성하고 세계질서 유지에 결정적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미일동맹은 미국의 아시아전략의 핵심으로 남을 수 있고, 또 그렇게 되어야 하며, 이러한 전략이 성공하려면 미일동맹은 공유된 가치에 기초한 개방적 동맹으로 발전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2차보고서는 동맹강화론의 내용으로 1차보고서와 비슷하게 헌법개정, 원활한 자위대해외파병과 국가안보기구 및 제도 개선을 위한 능동적 조치를 강조한다. 나아가 일본이 미사일방어체계 공동구축을 통해 무기금수원칙을 변경한 사실을 환영하면서, 미일간 위협인식의 간극이 없도록 하기 위해 정보공유가 강화되어야 하며 비슷한 맥락에서 군사(인적 기술적) 교류 확대를 주문하고 있고, 첨단항공기 F-22의 일본 배치를 요구하고 있다.

<표 1> 제1차, 제2차 '아미티지보고서' 내용 비교분석

이슈	제1차보고서(2000)	제2차보고서(2007)
미일동맹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국의 아시아 및 세계안보 전략의 중심 역할 그러나 미일은 중국의 적대적 반응을 우려해 신안보선언 실행 주저.</li> <li>• 미일동맹 수준으로 격상 집단적 자위권 행사에 대한 제약 해소 필요 유엔안보리상임이사국으로 진출하기 위해서도 평화과외에 대한 무력응징 의지 필요.</li> <li>• 미사일방어체계 협력 강화 군사기술협력 장려 일본이 비용분담에서 권력분담으로 역내 안보 역할 증대해야.</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세계동맹"으로서 미국 아시아 정책의 초석.</li> <li>• "일본의존불가론" 비판 미일동맹은 공유된 가치에 기초한 개방적 동맹으로 발전시키면서 아시아 계속 주도.</li> <li>• 동맹 강화하고 동맹내 일본의 역할을 증대하기 위해 일본헌법 개정, 원활한 자위대해외파병, 국가안보기구 및 제도 개선을 위한 조치 필요.</li> <li>• 미사일방어체계 공동구축을 통해 무기금수원칙 변경 환영 정보 공유 군사(인적 기술적) 교류 확대 F-22 배치</li> </ul>
일본 정치 경제 역사 외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본의 개혁은 메시지 유신에 비교 될 만큼 근본적 변화 가져올 수 있으나, 안정지향</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긍정적인 경제모델로서 자유화 조치 확대되어야 미일 FTA 추진하고 농업을 포함한</li> </ul>

	<p>적 일본 정치를 고려할 때 신속한 결과 기대하기 어려움 그러나 주권에 대한 일본국민의 새로운 경의는 미일동맹에 큰 함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제 개방, 규제철폐, 회계 및 기업 활동 투명성 제고 필요</li> <li>• 미국은 일본의 유엔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 계속 지원.</li> </ul>	<p>개방 필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본은 민주국가로서 국민의 뜻을 반영하여 야스쿠니 문제 등 과거사를 정리하고 이웃국들과의 관계를 개선할 수 있는 능력 구비 그러나 양방향적이고 객관적인 접근 필요.</li> <li>• 대외적으로 소프트파워적 접근 바람직.</li> </ul>
아시아 지역질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국의 무관심은 미국의 영향력 감소와 중국의 부상으로 이어질 가능성 패권체제는 비현실적, 비생산적 그러나 중국과의 "공동관리"는 양국 간 가치체계의 간극과 상호이익 구조에 대한 이해 결핍으로 바람직한 대안 아니며, 오히려 지역동맹이나 우방의 소외 불안 야기할 소지 그러나 미일 양극체제는 비효과적이며 가장 바람직한 대안은 강력한 미일동맹에 기초한 미·일·중 3각협력체계</li> <li>• 인디아는 강대국의 잠재력을 갖춘 민주국가로서 미일과의 전략적 동반자관계 구축은 중국을 견제하는 효과 기대할 수 있으나, 인디아 나름대로 중국과의 관계에서 이익이 발견된다는 사실 인식해야.</li> </ul>
중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일은 중국이 지역의 정치 경제 문제에서 긍정적인 세력이 되도록 협력하고, 전략대화를 통해 중국 문제에 지속적으로 참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국의 경제성장은 제로섬 관계로 볼 수 없으며, 특히 제조업의 성장은 미일의 구매력, 투자자본, 첨단기술에 종속됨을 의미.</li> <li>• 그러나 인권, 종교자유, 정치체제와 같은 가치의 간극은 신뢰부족 야기함으로써 대중협력의 장애로 작용 또한 성장에 따른 균현대화는 대만 문제 등 지역불안정 야기 소</li> </ul>

		<p>지 특히 대양해군 구축은 에너지 안보와 관련 큰 함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국은 국제규범과 이웃국들을 위협할 수 있는 비자유주의적 제도, 극단적 민족주의, 부패 등 중상주의로 진행할 소지 그러나 중국이 평화적 통합과 무해한 경쟁의 길을 선택할 수 있도록 유인제가 제공될 필요 있으며, 국제사회의 책임감 있는 이익공유자가 되도록 미일 이 공동노력 필요.</li> </ul>
한반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반도 화해 촉진 필요 한미일 3자조정그룹 지속적 지원 필요하며, 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 기회 만들 필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북한은 자신의 정치 경제 체계의 함정에 빠져 개혁에 미온적이고 김대중-노무현 및 클린턴 정부의 지극히 수용적인 정책을 거부하고 핵과 미사일 등으로 체제생존을 도모하고 있음 북핵문제는 통일 후 우크라이나식으로 해결될 가능성 증가.</li> <li>• 노무현 정부는 북한의 핵무기프로그램보다 한반도의 불안정을 더욱 위협적인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이러한 위협인식은 미일보다는 중국과 더 유사 그럼에도 미일한은 공동의 가치와 공유된 경제 안보 이익으로 연합되어있음 인식할 필요.</li> <li>• 작통권 전환 등 한미동맹 현대화 지지.</li> </ul>

둘째, 일본 정치 경제 역사 외교와 관련한 문제. 1차보고서는 집필 당시 상황을 반영하며 "보수적 안정지향적 일본 정치를 고려할 때 신속한 결과를 기대하기 어려움을 인정하면서도, 일본의 개혁은 메이지 유신에 비교 될 만큼 근본적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고 기대감을 나타낸다. 일본의 경제개방, 규제철폐, 회계 및 기업 활동 투명성 제고를 주문한다. 2차보고서는 일본을 긍정적인 발전모델로 제시하면서도, 1차 때 주문한 것처럼 자유화 조치를 확대하고, 특히 미일FTA 추진 및 농업을 포함한 개방을 역설하고 있다. 한국이 주목해야 할 점은 1차 2차를 막론하고 탈냉전기 미일동맹의 성공적 관리는 역시 경제 문제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는 점, 그리고 패권국은 대외경제문제에 있어 "자유주의"와 일반적으로 동격이라는 점을 명백히 보여준다는 점이다. 특히 미일FTA에 대한 2차보고서의 의지와 관련하여 한미FTA의 성과와 의미가 일정 부분 얽혀질 수 있을 것이다.

1차보고서는 외교 역사 문제와 관련 일본 민족주의의 부상을 미일동맹에서 일본의 역할을 증대시킬 수 있는 사안으로 연결시킨다. 즉 1차보고서는 "일본국민이 국기와 국가에 대해 공격 지위를 부여하고 센카쿠를 포함한 영토문제에 집중"하는 등 주권에 대해 "새로운 경의"를 표시함으로써 "미일동맹에 큰 함의"를 제공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동북아 각국이 일본 민족주의의 부상을 경계하는 것과는 달리 1차보고서는 이것이 미국의 안보이익과 부합한다고 보고, 영토 문제와 일본의 유엔안보리상임이사국 진출 문제와 관련 계속적 지원을 주문하고 있다는 점이 눈에 띈다. 2차보고서는 이른바 "과거사" 등의 문제와 관련 미국 사회의 변화를 반영하는듯하다. 1차보고서가 "과거사" 문제에 유의하지 않고, 오히려 일본 민족주의의 부상을 미국 이익과 부합한다는 관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한 것과는 달리, 2차보고서는 이 문제의 파괴력을 인식하고 원론적으로나마 언급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2차보고서는 일본은 민주국가로서 국민의 뜻을 반영하여 야스쿠니 문제 등 과거사를 정리하고 이웃국들과의 관계를 개선할 수 있는 능력을 구비하고 있다고 우회적으로 일본의 전향적 조치를 촉구하고 있으나, 다른 한편 이 문제는 "양방향적이고 객관적"으로 접근되어야 한다고 신중하게 제시함으로써 '역화(逆火 backfire)'의 위험성을 경계하고 있다. '아미티지보고서'의 집필자들은, 대부분의 여타 미국의 전략가들과 마찬가지로, 미일동맹의 강화와 일본 역할의 확대를 원하면서도 역사 문제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일본을 조심스럽게 활용해야 한다고 보고 있는 듯하다. 10여 년 전 카터 집권 시 국가안보보좌관을 지냈던 브레진스키의 "유라시아 지전략(A Geostategy for Eurasia)"과 마찬가지로 1, 2차 '아미티지보고서'도 일본이 대외 문제에 있어 소프트파워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는 것이다. 아울러, 미국의 역대 정부가 오랫동안 한일협력을 촉구 격려했다는 사실과 이제 "썩튼 한·일간 경제협력을 미국이 장려해야 한다"는 '아미티지보고서'의 제안은 이러한 일본의 역사적 취약점에 대한 미국의 고민이 읽혀지는 부분이다.

셋째, 2차보고서 집필자들이 1차보고서에 비해 많은 지면을 할애한 부분은 아시아 지역질서 관리에 관한 것이다. 1차보고서 작성시에 비해 중국의 부상, 한국을 비롯한 한반도 문제의 복잡화,

인디아의 전략적 가치 급등, 그리고 서구적 이념과 가치에 관한 새로운 인식에 대해 언급할 필요가 제기되었기 때문일 것이다. 이들은 일단 아시아에서의 미국 단독관리체제는 비현실적이고 비생산적이라 단언한다. 중국과의 "공동관리체제(condominium)"는 양국 간 가치체계의 간극과 상호이익구조에 대한 이해 결핍으로 바람직한 대안이 되지 못한다. 미국-일본 대(對) 중국의 양극구조도 비효과적이다. 대부분의 지역 강국들이 중립을 선언하거나 중국 편에 설 것이고, 궁극적으로, 미일 민주주의의 강력한 모범(模範)을 약화시켜며 이 지역을 안정시키거나 중국의 긍정적 변화 이끌어내는데 장애가 될 냉전이나 19세기 세력균형 논리로 아시아를 되돌릴 것이기 때문이다. 가장 바람직한 구조는 미국과 성공적인 지역강국들이 지역문제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체제이다. 즉 이들은 "일본, 인디아, 오스트레일리아, 싱가포르 등이 미국과의 동반자 관계와 공유된 민주적 가치에 기초해 모범을 보임으로써 주도하는 개방적 구조야말로 법의 지배와 증진하는 정치적 자유에 바탕을 둔 자유시장, 지속적 번영을 실현하려는 아시아를 위한 가장 효과적인" 대안이라고 제시한다.

2차보고서의 차별성은 인디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미일동맹이 인디아를 포섭하는 비전을 담고 있다는데 있다. 이는 최근 미국이 NPT회원국이 아닌 인디아와 핵협정을 체결한 것과 맥을 같이 한다. 보고서 작성자들에 따르면, "인디아는 강대국의 잠재력을 갖춘 민주국가로서 미일과의 전략적 동반자관계가 구축되면 중국을 견제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그러나 이들은 "인디아 나름대로 중국과의 관계에서 이익이 발견된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고 지나친 기대에 선을 긋고 있다.

1차보고서가 중요하게 처리하지 않은 아시아의 지역질서를 2차보고서가 상세히 논한 이유는 중국의 미래를 보는 관점이 달라졌다는 데서 찾을 수 있다. 즉 지난 7년간 중국의 지속적 성장과 그에 기초한 공세적 외교가 미국의 대아시아 영향력을 잠식하고 있다는 인식을 반영하고 있다는 말이다. 특히 중국의 정치체제나 시장에 대한 불신 등을 언급하는 한편 미국과 공유된 가치와 그에 기초한 동맹이나 우방을 자주 강조하는 것은 미국이 이제 중국의 미래를 공세적으로 관리해야 나가야 한다는 집필자들의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이런 맥락에서 "미일-인디아 연대" 구축론이 돋보이는 것이다.

아시아 지역질서 논의에서 특기할만한 점은 가장 바람직한 대안에 시장민주주의 강국인 한국이 포함되어있지 않다는 것이다. "한국의 대북인식이 미일보다는 중국과 더 유사하다"는 집필자들의 인식이 배어있을 수 있다. 집필자들이 미국의 양당을 아우르는 전문가들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한국 누락"은 한국의 외교와 미래에 대해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할 것이다.

넷째, 1차보고서가 냉전 후 "미일동맹의 표류" 또는 동맹강화의 지연에 대한 우려를 담았다면 2차보고서는 주로 동맹과 지역질서의 미래를 다루고 있다. 당연히 1차보고서와는 달리 중국의 미래가 2차보고서의 주목을 받고 있다. 1차보고서는 "미일은 중국이 지역의 정치 경제 문제에서 긍정적인 세력이 되도록 협력하고, 전략대화를 통해 중국 문제에 지속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간단히 제시하고 있다. 중국의 소위 "긍정적 잠재력"을 미일의 협력으로 이끌어낼 수 있다는 신중한

자신감이 워한다. 그러나 2차보고서는 중국의 미래를 미일이 적극적으로 관리하지 않으면 위험할 수 있다는 위기의식의 일면을 보여준다. 집필자들은 일단 "중국의 경제성장은 제로섬 관계로 볼 수 없으며, 특히 제조업의 성장은 중국이 미일의 구매력, 투자자본, 첨단기술에 종속됨을 의미하므로 우려의 대상은 아니"라고 본다. 그러나 이들에 따르면, 미중 간 "인권, 종교자유, 정치체제와 같은 가치의 간극은 "신뢰부족(trust deficit)"을 야기함으로써 협력의 장애로 작용할 수 있고, 또한 성장에 따른 균현대화는 대만 문제 등 지역불안정을 야기할 소지를 갖는다. 특히 중국의 대양해군 구축은 에너지 안보와 관련 큰 함의를 갖는다"고 이들은 보고 있다. 나아가 "중국은 국제규범과 이웃국들을 위협할 수 있는 비자유주의적 제도, 극단적 민족주의, 부패 등 중상주의로 진행할 소지도 있다. 그러나 이들은 미일이 중국의 미래와 관련 단정적인 태도를 취해서는 안된다고 보고, 중국이 "평화적 통합과 무해한 경쟁의 길을 선택할 수 있도록 유인제를 제공할 필요가 있으며, 국제사회의 책임감있는 이익공유자가 되도록 미일이 공동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요컨대 2차보고서는 중국의 의미가 더 커지고 더 긴박하게 와닿는다는 공유된 인식 속에서 미일의 보다 진지하고 긴장감 있는 자세를 촉구하고 있다.

다섯째, 1, 2차보고서의 또 다른 차이는 후자가 한반도 문제에 더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데 있다. 1차보고서는 "한반도에서 화해를 촉진하고 한미일 3자조정그룹(TCOG)을 지속적으로 지원하며, 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2차보고서는 한반도 문제에 대해 보다 구체적이면서도 광범위하게 논의하고 있다. 먼저 북한의 미래. 집필자들에 따르면, "북한은 자신의 정치 경제 체계의 함정에 빠져 개혁에 미온적이고, 김대중-노무현 및 클린턴 정부의 지극히 수용적인 정책을 거부하고 핵과 미사일 등으로 체제생존을 도모하고 있다." 이들은 6자회담으로 북핵이 동결된다면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문제의 해소는 통일 후 "우크라이나 식"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앞서 언급했지만, 한반도 문제와 관련한 제2차 '아미티지보고서'의 핵심은 대북인식, 보다 구체적으로 노무현 정부의 대북인식이 미국이나 일본에서 공감을 얻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집필자들은 한국의 노무현 정부가 "북한의 핵무기프로그램보다 한반도의 불안정을 더욱 위협적인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이러한 위협인식은 미일보다는 중국과 더 유사하다"고 보고 있다. 물론 이들이 "미국 일본 한국이 공동의 가치와 공유된 경제 안보 이익으로 연합되어있음"을 인식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한국에 대한 비판의 정도를 완화하고 있지만, 중국의 부상과 지역외교강화가 동아시아국가들에 대해 가지는 흡인력을 경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국은 중국의 손에 떨어질 잘 익은 사과"라는 미 의회 관계자의 발언은 이러한 미국의 불안감을 반영하는 또 다른 하나의 사례일 것이다.

## V.

주지하듯, 제1차 '아미티지보고서'의 정책대안은 대부분 제 1기 부시 정부의 동아시아 정책으로

실행되었다. 일본의 고이즈미 정부는 부시 정부의 후원에 힘입어 동아시아에서 발언권을 확대하고 "보통국가화"의 과정으로 진입하였다. 예를 들어, 일본은 미사일방어체계의 공동연구로부터 공동개발로 부시 정부의 요구에 호응하였고, 나아가 2001년에 반테러특별조치법, 2003년에 유사법제와 이라크부흥지원법 등 일련의 조치들을 취했다. 또 인도양에 보급함을 보냈고 이라크에 자위대를 파견하는 등 자위대의 활동범위도 확대해 나갔다. 역사 문제에 대해서도 주변국의 비판에 크게 개의하지 않았다. 이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제 1차보고서의 집필자들이 부시 행정부의 외교안보팀에 대거 참여했기 때문일 것이다. 제 2차보고서는 이런 면에서 차이를 가진다. 즉 제2차보고서 작성자 중 제2의 울포위츠, 아미티지, 그린, 켈리, 패터슨의 총합을 기대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정책적 영향력이 1차만큼은 되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비중은 다르겠지만, 나이 Jr.와 캄블이 민주당 집권 시 중책을 맡을 수 있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다. 제 2차 보고서 작성에 새롭게 참여한 존 할레는 과거 클린턴 정부 때 국방부 부장관을 지낸 인사이다. 2차보고서에 새롭게 진입한 보수 인사들 중 '북한불법행위봉쇄조치(The North Korea Illicit Activities Initiative)' 를 주도한 데이비드 애셔와 과거 부시 Sr./웨일, 부시J r./체니 팀에서 활약한 캐러 뷰는 공화당 집권 시 역할이 배정될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제2차보고서가 1차보고서와 마찬가지로 초당적 접근에 따른 결론이라는 데 있다. 즉 2차보고서도 미국의 거시적인 차원에서의 국가이익을 증진하는 데 그 초점이 맞춰져있으므로 차기 어느 당이 집권하더라도 진지하게 고려될 대상임은 틀림없어 보인다.

## VI.

위에서 진행한 '아미티지보고서' 비교분석은 한국의 전략가와 정책입안자들에게 커다란 함의를 제공하고 있다. 아래에서는 몇 가지를 간단히 논의한다. 먼저, 한국은 외교안보 문제와 관련하여 중장기적 계획과 추구하는 국가상이나 국가전략이 존재하는가 하는 의문이다. 한국은 어떠한 나라가 되고 싶은가? 한국은 민족 문제와 동맹의 문제가 중첩되어 있는 바, 바람직한 국가상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위의 중첩된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단기적으로 이를 수 있는 것은 무엇이고, 중장기적으로만 가능한 사안은 무엇인가?

노무현 정부가 수년 전 제시한 이른바 '동북아균형자론' 은 한국의 국가전략과 관련하여 분별력 있게 구체화되는 경우 효과적인 정책대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과거 제시되었던 '동북아균형자론' 은 용어의 문제, 경성균형(hard-balancing)으로 인식되는 문제, 그리고 연성균형(soft-balancing)의 의미 확정의 문제를 가지고 있다. 먼저, "밸런서(balancer)" 라는 용어는 세력균형이론이나 정책에서 그 연원이 있는 바, 세력균형정책은 강대국들의 이해조정책의 일환으로서 약소국들의 영토분할이나 강대국간 완충지 형성 등이 전형적인 결과였다.

‘태프트-카츠라 밀약’ 등에서 비롯된 을사늑약과 주권상실, 한반도의 분단과 과거 정치군사적 남북대치 등도 모두 강대국들의 세력균형책의 결과였다. 따라서 전통적 의미에서의 세력균형 관계에 한국이 한몫 끼었다는 발상이나 인식은 한국의 “평화 번영” 추구라는 외교 이미지 및 안보 철학과 상충하며 소모적인 논쟁거리로서 그 용어의 의미를 재확립할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아울러 ‘밸런서’라는 용어는 19세기 유럽대륙에서의 프랑스 독일 간 패권 경쟁에 개입하여 지역안정을 도모하려 했던 영국의 소위 “영광된 고립(splendid isolation)”을 일컫는 것으로서 막강한 물리력을 전제로 하였다. 만일 2005년 국군의 날 연설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제시한 것이 “한국군”의 균형자 역할이라면, 한국의 이러한 경성균형자 역할이 진정 가능한지의 문제가 제기된다. 중요한 것은 동북아의 안보동학이 중국과 일본 간의 경쟁이 아닌 중국 등을 한편으로 하고 미일동맹을 다른 한편으로 하는 청산되지 않은 “대륙세력” 대 “해양세력”의 냉전적 구도를 취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양차 ‘아미티지보고서’에서 보듯, 이데올로기나 정치체제를 외교안보정책의 주요 결정 기준으로 규정하고 있는 미국이 중국을 불신하고 일본을 중시하고 있는 상황 하에서 양자간에 한국이 세력균형자로서 의미 있는 영향을 주기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사료된다. 나아가 한국이 일본을 견제하기 위해 중국을 지지하는 경우 미국과 일본 간의 긴밀한 관계를 고려할 때 한국은 한미동맹을 기본부터 재고해야 하는 어려운 결단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반대로 한국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미일동맹을 지지하는 경우 한국이 가장 원하지 않는 신냉전구도가 형성될 것이며, 이는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 그리고 통일에 커다란 제약으로 작용할 것이다. 따라서 어떤 경우에도 전통적인 의미에서의 균형자론은 한국의 사활적 이익에 배치되는 결과를 산출할 것이다.

한국 정부가 상징하는 ‘동북아균형자론’이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유지, 그리고 동북아 지역의 안정을 효과적으로 촉진하기 위해서는 균형이라는 개념을 재정립하고 재확인하는 노력이 필수적이다. 사실 균형이라는 용어가 갖는 한국적 의미는 그의 서양식 직역(直譯)인 밸런서와는 큰 거리를 갖고 있다. 한국적 의미에서의 균형은 안정(stability), 정의(justice), 순리(harmony)라는 개념을 포괄하는 중용(中庸) 성을 그 핵심으로 하고 있다고 사료된다. 여기에 침략의 역사가 없고, 또 현재 한류(韓流)에 기초해 동북아 각국과 모두 친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한국의 평화력과 문화력을 보태면 한국은 전통적 의미에서의 균형자라기보다는 동북아의 평화, 정의, 친선을 목표로 새로운 지식과 비전을 창출하고 주도하는 중용국가(中庸國家) 또는 지적국가(知的國家)로 자리매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주지하듯, 한국이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를 추동하기 위해서는 동북아 각국에 대한 한국의 제안과 주도가 설득력을 확보해야 한다. 예를 들어, 한국이 미국과의 관계에서 과거처럼 종속적 역할을 계속 자임하는 경우 또는 전통적 동맹국으로서 탄력 없는 추수(追隨)로 일관할 경우 지역과

한반도의 평화과정에서 한국의 역할은 크게 제한될 것이다. 한국은 위와 같은 전략적 결정을 통해 성숙한 동맹을 지향하는 가운데 동북아다자간안보협력을 제도화하는 토대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노력과 함께 한국은 정책이나 전략을 입안함에 있어 그것이 얼마나 실행될 수 있고, 얼마나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 미리 계산할 뿐 아니라, 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우호적인 조건을 형성하는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 예를 들어, 한국의 대북정책이 그 자체로 아무리 합리적이라 해도 북한이 위협의 원천으로 간주하고 직접상대하려는 미국이 한국의 정책을 적극적으로 지지하지 않으면 소기의 목표를 달성하기 어렵다. 한국의 대북정책이 사실상 워싱턴에서 만들어진다 해도 큰 과장은 아니다. 물론 김대중 노무현 정부가 대미 외교 자율성을 일정한 정도 제고한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지만 한국의 정책과 전략을 지원하고 추동하는 워싱턴 세력을 배양하고 관리하지 못한 것도 또한 엄연한 사실이다. 예를 들어, 양차 '아미티지보고서'에 집필자로 참여한 프랭크 자누지는 미국 의회가 미국의 대한반도 정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조정 관리하는 중요한 인물이다. 의회 자체도 감독권과 결의안 채택, 청문회 개최 등을 통해 상당한 힘을 발휘한다. 그런데 이런 인물이 일본 히타치 사의 재정 지원 하에 게이오 대학교에 적을 두고 연구안식년을 보낸다는 사실은 결코 적지 않은 의미를 갖는다. 미 상원 민주당 측 선임보좌관으로 귀환하면 그가 일본 문제를 과거와 같은 관점에서 보게 될지 궁금하다. 나아가, 일본 전문가들이 한반도 문제도 함께 다루는 미국의 사정을 감안할 때 일본 렌즈를 통한 한반도 문제 분석과 해법이 한국에게 얼마나 심각한 위협으로 다가올지 우려된다. 한국이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할 사례라고 판단된다.

비슷한 맥락에서, '아미티지보고서'의 중요성이 강조된다. 재차 언급하지만, '아미티지보고서'의 큰 의미는 그것이 초당적 협력에 의한 결과물이라는 데 있다. 외교안보는 공공재로서 그 혜택이 국내적으로 균질하게 배분된다는 측면에서 충분히 초당적 협력이 가능한 사안이다. 단지 한국의 성숙하지 못한 정치지형이 그것을 가로막고 있을 뿐이다. 한국의 학계와 시민사회는 외교안보와 관련 소비적 이념논쟁에 매몰되어 있는 극단주의자들을 제외한 이른바 합리적 좌와 온건 우로 이뤄지는 "외교안보의 중간계급(middle class)"을 형성하고 배양해야 할 도덕적 의무를 지닌다. 초당적 '아미티지보고서'가 이러한 도정(道程)의 기점이 될 수 있을 것이다.(2007/04/11)

